

# 도, 양자기술 결합한 산업으로 전환 시동

###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서 '양자 관련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 양자기술 기반 농생명·바이오·에너지 산업과 융합·제도개선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차세대 핵심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을 지역 주력산업과 결합해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본격 나섰다.

농생명·바이오·에너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도는 15일 전북테크비즈니스센터에서 양자 관련 특례 발굴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양자기술 기반 산업과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 상용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특례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양자기술은 기존 기술 대비 월등히 빠른 연산 능력과 초정밀 측정이 가능한 미래 전략 분야로 평가된다. 특히 신약 개발, 첨단 센서, 보안통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이러한 기술을 지역의 농생명·바이오 산업과 접목할 경우 생산성 향상과 기술 고도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전문가들은 산업 현장에서 기술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

드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실증 과정에서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적용하는 특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기업 참여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까지 산업 저변을 넓히고, 고가 연구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전북자치도는 현재 전북대학교 연구시설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관련 기업이 참여하는 양자기술 실증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실증 중심의 산업화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전북형 양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

는 계획이다.

또한 국정과제와 연계한 특례 발굴, 초광역 협력 체계 구축, 시군 핵심사업과 연계한 현장 중심 컨설팅을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은 향후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반영돼 제도적 기반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문성철 전북자치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양자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 핵심 분야"라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례를 통해 기술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전북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북자치도가 양자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 전환에 속도를 내면서, 지역 경제 구조가 첨단 기술 중심으로 재편될지 주목된다.

/10만호기자

##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

### 전북자치도, 행안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공모 선정

전북특별자치도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 세계 자원봉사자의 해 기념 10대 자원봉사 테마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최

이번 공모는 코로나 이후 위축된 자원봉사활동의 재도약과 지속 가능한 참여 기반 조성을 위해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자원봉사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우수 실천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탄소중립과 마이크로 봉사를 융합한 생활밀착형 자원봉사 프로그램인 '함께 걷고, 함께 나누는 실천 프로젝트'를 제안해 우수성을 인정받으며 전국 10개 선정 지자체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2천만 원을 확보, 총 4천만원 규모의 사업비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며, 도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쉽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보호 실천과 나

눔 활동을 결합한 참여형 자원봉사 모델로 구성한다.

모든 '함께 걷고 함께 지키는 봉사여행, 플로깅은 도내 하천, 산책로, 자전거길, 주요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GIS 기반 앱을 활용한 플로깅 활동을 운영해 걷기와 환경정화 활동을 동시에 실천하는 참여형 자원봉사 모델을 구축한다.

특히 반려견 산책과 연계한 생활형 환경봉사 프로그램을 도입해 도민은 물론 관광객과 민간단체의 참여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그랜드립사업(공유농장) 연계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도내 9개소에서 운영 중인 공유농장고를 중심으로 물품 정리, 식품 관리, 이용 안내, 물품 나눔 지원 등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를 위한 생활밀착형 봉사활동을 추진한다. 5월 초부터 14개 시군과 연계한 본격적인 릴레이 실천 프로그램 운영에 착수할 계획이다.

/10만호기자

# 김관영 도지사, 전주지역 문화·관광 인프라 현장 점검 나서

### 세계서예비엔날레관·도립국악원·전주 MICE복합단지 현장 방문... 단발성 아닌 콘텐츠·관광·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기반 구체화 강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전주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을 살폈다.

이번 현장 행정은 단순한 공정 확인을 넘어 시설 조성 중심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콘텐츠 운영과 관광 연계 강화를 중점에 두고, 이를 지역 경제 성장으로 연결할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먼저 세계서예비엔날레관에서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정 상황과 공간 구성 계획을 점검했다. 시설 준공 이후 활용도가 성과를 좌우하는 만큼, 전시 중심을 넘어 교육·체험·창업지원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콘텐츠 기획과 운영 준비를 건립 단계부터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김 지사가 15일 세계서예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전주 MICE복합단지 등 지역 문화·관광 분야 핵심 인프라 구축 현장을 찾아 사업 추진현황과 운영 방향을 살피고 있다.

도립국악원에서는 공연장과 교육시설을 둘러보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국악원은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연습·공연·교육 공간을 모아 상설 공연과 교육 운영의 기

반을 갖추고 있다. 김 지사는 국악 공연과 교육이 개별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상설·정기 프로그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도내 시군과 연계한 확산 구조 마련이 필요

하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전주 MICE복합단지에서는 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사업 추진 상황을 보고받고 공사현장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시·회의 기능에 그치지 않고 문화·관광 요소와 결합해 체류형 소비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변 시설·상권과의 연계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현장 점검을 통해 완공 이후의 운영과 연계가 사업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를 재확인하며, 개별 시설 단위를 넘어 문화·관광 기능이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시설이 단순한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콘텐츠와 관광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되도록 현장에서 점검하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만호기자

# 전북자치도,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수행기관 재공모

### 24시간 1:1 돌봄기관 2곳 추가 선정... 23~24일 접수

전북특별자치도는 최종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수행기관 선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재공모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접수는 23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다. 총 2개 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공모는 자해·타해 등 도전

적 행동으로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된다.

해당 사업은 이용자 1명당 전담 인력 1명을 배치하는 24시간 1:1 맞춤형 돌봄으로, 낮 활동과 주거, 야간 돌봄

을 연계해 제공한다. 서비스는 주간(오전 9시~오후 5시)과 야간(오후 5시~익일 오전 9시)으로 운영된다.

사업 규모는 총 15억6,700만원(국비 50%, 도비 50%)이며, 이용자 1인 기준 연간 약 1억 5,000만원 수준의 운영비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관련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춘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도는 수행기관 1개소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최종증 발달장애인 9명이 이용하고 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의 일상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063-714-2610)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심의를 거쳐 이용 여부가 결정된다.

/10만호기자

# "도민 세금 유용 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 범도민 대책위 소속 회원들, 민주 도지사 경선 과정 식사비 대납 등 의혹 진상규명 요구

전북 지역 시민단체들이 도민 세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민 세금 유용 수사 촉구 범도민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 명은 1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제기된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과정의 식사비 대납 및 공직 자금 유용 의혹에 대해 강도 높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이날 대책위 소속 CBMC 전북연합회 오정현 회장은 회견문을 읽으며 "도민의 혈세는 결코 개인의 선거 자금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도민에 대한 배신이자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재심까지 기각했지만, 해당 판단은 부실한 조사와 해명 부족 속에서 내려진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당 차원의 자체 판단으로 사안을 덮을 것이 아니라 사법당국의 객관적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논란이 된 식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 "도리 카드 사용 여부와 비용



'도민 세금 유용 수사 촉구 범도민 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10여 명은 15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결제 방식 등 핵심 사실 관계가 당사자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며 "입수 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경선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이 훼손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사실 관계가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선이 진행될 경우 도민 불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수사당국을 향해 △식사비 대납 사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

범 사안 전면 조사 △수사 과정과 결과의 투명성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불법'이 확인될 경우 자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책위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자신이 고발인이라며 "현재 일부 후보 측 해명과 관련된 증언이 상충하고 있어 명확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며 "정치적 공방이 아닌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주권행동

전북(삼일대표 이승규), (사)탄소중립 수소경제운동본부(이사장 이승룡), (사)새희망포럼 전북(삼일대표 김동진), CBMC 전북연합회(회장 오정현), 전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나춘균), 촛불행동부인(김명복)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대책위는 향후 신속한 수사 촉구를 위해 전경철청 앞 1인 시위와 범도민 집회 추가 행동 등을 이어가며 수사 촉구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10만호기자

# 도의회 의원들, 임시회서 5분 발언 이어가

### 국비 확보 방식 체질 개선, 전북형 민생회복 패키지 수립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원 4명이 15일 열린 제42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이어갔다.

먼저 한정수 의원(익산 4)은 "전북자치도가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를 열었으나, 내실을 들여다보면 결코 낙관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국가예산 확보 방식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날성률 중심에서 요구 규모 확대 로의 전환 △부처 공감대 형성을 위한 '맞춤형 명분' 강화 △중장기 성장을 견인할 '신규사업' 발굴 확대 △국회 대응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전략적 전환을 제안했다.

영영선 의원(정읍2)은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한 전북형 민생회복 패키지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영 의원은 실질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에너지 고효율 설비 도입 및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 확대, 지역 경제 활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선반기 조

기 발주, 면세유 예산 증액 및 화물업계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과 같은 3대 대책의 즉각적인 시행을 제안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전북 어른이 직면한 소비 위기를 강력히 경고하며, "전북도가 직접 나서 어른 소멸을 막기 위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고 기획 단계부터 강력히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군산·부안·고창의 해양 환경이 각각 다른 만큼,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강점을 살린 맞춤형 특화 사업을 추진해야만 어른의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경규 의원(임실)은 "전북자치도 장애인체육 대표선수들의 타 시도 유출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장애인 실업팀 창단과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10만호기자

# 군산시장 결선 진출 김재준 후보 자질 공방 확산

### "사생활" vs "도덕성"... 이혼 사실 알려져 유권자 반응 엇갈려

더불어민주당 군산시장 선거 결선에 진출한 김재준 후보를 둘러싸고 최근 사생활 관련 논란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김 후보의 이혼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를 둘러싼 평가와 해석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엇갈리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 후보는 과거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공직 출마에 제한이 되는 사안이다. 다만 일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공직 수행 능력과 직접 연결짓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을 맡게 될 경우 높은 수준의 도

덕성과 신뢰가 요구되는 만큼 유권자가 참고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후보는 그동안 청와대 춘추관장(1급) 경력과 각종 TV 토론회를 통해 안정적인 이미지로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이력과 공직 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한다.

정치관계에서는 이번 논란이 선거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유권자 판단은 결국 정책, 행정 능력, 지역 발전 비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질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이번 군산시장 선거는 지역 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핵심 쟁점으로 꼽히고 있어, 후보 개인에 대한 평가와 정책 검증이 함께 이어질 전망이다.

/권산=김만호기자

# 김영일 군산시장 예비후보,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 공약 발표

김영일 군산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 공약을 내걸었다.

이는 민생경제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생 회복의 즉각적 마중물이 필요하다. 고물가·고금리로 위축된 소비시장을 회복하기 위해 시민 1인당 100만원의 직접 지원이 절실하

다"며 "지역 경제 순순환을 위해 전액 군산시립상품권으로 지급해 소상공인 매출로 100% 연결되는 경제 엔진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배너 25만면씩 총 4회, 일기 내 100만원 지원을 완료할 예정으로 총소요 예산은 2550억원 내외로 연간 638억원이 소요돼 확실한 내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산=김만호기자